

방향 잃은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본지 김한웅 부장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는 변죽만 울리다 끝날 것인가. 아니면 당초의 취지대로 네이밍화로 국내산과 외국산 닭고기와의 차별화, 그리고 포장을 통한 닭고기의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체제마련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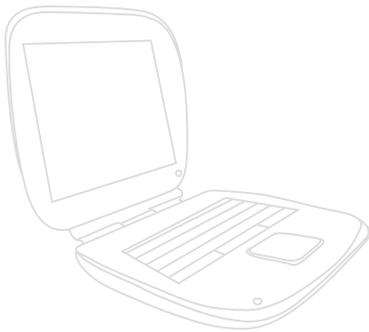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두 가지 모두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초의 취지를 무리 없이 모두 만족시킬 수만 있다면 국내 닭고기 소비시장에서 국내산 닭고기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포장유통 의무화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는데 이견을 제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1차적으로 8만수 이상 작업장을 대상으로 포장유통 의무화 시행에 들어간 현재의 시점에서 살펴볼 때 무리한 포장유통 의무화 시행은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물론 1차 대상업체들은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시책에 순응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각 계열업체들의 현실인 듯하다.

정책당국은 닭고기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포장유통 의무



화 시행을 요구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나, 이는 외국산 닭고기 수입이 급증, 국내 닭고기 생산량의 30%를 잠식하는 가운데 이를 제재할 만한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네이밍을 동반하는 포장유통 의무화를 선택하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었다.

또한 영세한 국내 닭고기 생산업체들의 어려움을 감안, 도계시설의 개선, 보완을 위해 자금지원의 필요성과 포장유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줄 것도 같이 건의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국내산 닭고기 제품의 활로 모색을 위해 주장했던 사업이 이제는 오히려 자신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 같은 양상은 2차, 3차 중·소규모의 대상업체는 물론이고 이미 포장유통 시행에 들어간 1차 대상업체 중에도 불안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포장유통 의무화 사업의 주요 타깃이었던 가공장 등 외국산 닭고기 취급업체의 사업 시행은 고스란히 뒤로 유보된 채 국내산 닭고기 생산업체들만 모든 걸 감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다.

여기에 AI의 발생으로 가뜩이나 경영여건이 어려워져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일방적인 시설투자는 무리

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또한 업계의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앞서간 정부 정책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정책당국은 큰 업체부터 시작하고 반응을 보가며 후위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뜻에서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의 물꼬를 텃으나 그 결과는 결코 밝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농림부는 계육협회, 오리협회와 기 시행에 들어간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동우, 올품 등 5개 작업장을 대상으로 포장유통 시행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고, 또 경기지역 가금육 작업장과 식육포장처리업, 판매장업자를 대상으로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확대시행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 보서는 1차 대상업체보다는 2차 대상업체가, 2차 대상업체보다는 3차 대상업체가 포장유통 의무화를 시행하는데 있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포장유통 시행에 들어간 업체들은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 2, 3차 대상업체들은 업체들대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가금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가 화호유구(畫虎類狗)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